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통일문제 서술의 특징

: 북한사, 통일논의 및 남북관계사 인식의 상호 제약을 중심으로

김지형(서원대학교)

논문 요약

2014년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북한사, 통일논의, 남북관계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사 서술에 반영돼 있는 역사인식은 남북 체제대결적, 우열적 사고 방식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사 전개에 내적 맥락을 강조하기보다 현상에 대한 비판적 서술과 문제제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북한사에 대한 냉전적, 우적론적 서술 경향은 통일논의와 남북관계사 서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통일논의에 관한 서술의 경우, 경제적 가치 논의에 집중하였다. 탈냉전 이후 정부, 언론 등에 의해 주도된 논의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특성은 분단 이후 나타난 다양한 통일논의와 남북의 통일정책 및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 대신 통일논의를 단조로운 경제문제로 이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남북관계사는 그간의 남북 당국간 주요 합의 내용과 의의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일부의 경우, 핵심적 내용과 교육의 초점이 잘못 설정된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단일한 서술도 확인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사에 대한 일방주의적 서술 방식이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대상화하는 대신 남북 쌍방의 상호 작용에 입각한 남북관계사 서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분단 극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과거 국정 교과서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제어: 한국사 교과서, 북한사, 통일논의, 남북관계, 한국현대사, 역사인식

I. 시작하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총 6단원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현대사 부분은 마지막 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에 해당한다. 한국사 교과서의 전체 분량은 대체로 330~430쪽 정도인데, 이 중 제6단원 현대사 분량은 50~69쪽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통일문제 서술은 현대사 단원 중에서도 5~12쪽 분량에 걸쳐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통일문제 관련 서술이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약 20%까지 검인정 교과서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한국사 교과서의 단원 구성이 동일한 이유는 정부의 교과서 집필 기준¹⁾을 그대로 따른 결과이다. 획일적인 단원 구성은 출판사별 집필진의 차이와 특성이 드러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낳았다. 이같은 문제점은 동일한 단원 구성을 기반으로 할뿐만 아니라 대강의 내용까지 ‘집필 기준’이라는 지침 형태로 집필자들에게 요구되는 현 검정제도의 근본적 한계에 기인한다. 집필 기준에서는 현대사 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강조점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 둘째,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 참상과 영향을 살펴본다. 셋째, 4·19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넷째, 경제 발전의 성과와 과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해한다. 다섯째, 북한의 실상과 남북한 사의의 화해, 협력 노력을 파악한다. 여섯째,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 영토문제,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탐구한다. 일곱째, 세계화 속의 대한민국의

1)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2011(이하 ‘집필 기준’으로 약칭). 2009년 이전에는 ‘준거안’에 입각하여 교과서 집필이 관리되었다. 준거안과 집필기준 등 정부의 ‘집필 지침’ 변천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의 제2장이 참조된다. 박진동, “해방후 현대사 교육 내용 기준의 변천과 국사교과서 서술.” 『역사학보』 제205집, 2010.

위상과 국제사회에 공헌 방안을 탐색한다.

위와 같이 제시된 한국현대사의 핵심 내용 가운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북한·통일문제는 다섯째 항목과 관련된다. 다섯째 항목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집필 지침은 다음과 같다.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오늘날 북한의 세습 체제 및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에 따른 체제 위기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서술한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산업 불균형의 문제점을 기술한다. 1970년대 이후 진행된 남북회담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을 서술한다.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북한의 도발 등으로 남북 간의 갈등이 반복되었으나, 통일을 위한 남북한 당국 간의 평화 체제 구축 협상과 민간 부문의 교류·협력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음에 유의한다.”²⁾

이상과 같은 집필 기준에서 확인되는 강조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사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요구하고 있다. 세습 체제, 경제 실패, 인권 문제 등을 비판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남북 대화를 중심으로 남측 정부의 통일 정책을 강조하라는 주문이다. 북한의 대남 정책과 노선에 의한 상호 관련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부 당국과 민간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강조이다. 통일문제와 남북교류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의 역사 및 역동성은 간과되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몇몇 연구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특히 현대사 부분에 대한 분석적 접근도 여러 차례 수행되었다.³⁾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을 둘러싼 학계 안팎

의 뜨거운 관심과 논란에 대한 학계와 교육현장의 진지한 대응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소모성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진행된 반면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정부의 집필 기준에 입각한 2014년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서술의 특징과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한국사』 7종⁴⁾ 교과서를 대상으로 북한사, 통일논의, 남북관계사가 어떤 관점과 내용으로 서술되었는지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집필 기준에 따른 교과서 서술 내용에 대해 평가할 경우, 그간 학계의 연구 성과와 쟁점 등이 어느 정도 수렴되었으며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가치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발전적, 미래지향적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할 것이다. 또한 북한사 서술의 관점과 의도가 통일논의 서술에 반영된 인식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북한사 서술의 특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사 서술에 투사된 역사인식과 내용 및 성격 역시 이 글의 주된 관심사이다. ‘한국현대사’라는 범주 속에 ‘남한사’와 ‘북한사’에 대한 독자성과 상호 연관성이 어떻게 교착되는가 하는 문제는 ‘남북관계사’ 서술에서 나타나는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띠기 때문이다. 즉 교과서에 나타난 남한사, 북한사 인식 및 서술과 통일논의, 남북관계사 인식 및 서술의 상호 제약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그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위의 자료, p. 16.

3) 현대사 서술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박태균,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 분석.” 『역사교육』 116, 2010; 방대광, “역사 교과서, 현대사를 어디까지 서술할 것인가?” 『역사와 교육』 제18집, 2014; 김정인, “국정 『국사』 교과서와 개정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체계와 내용 분석.” 『역사와 현실』 제92호, 2014; 김태우, “역사교과서 이념논쟁과 학문의 위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현대사 비교.” 『역사와 현실』 제92호, 2014.

4) 최종 검토에 통과한 2014년판 교과서는 총 8종이지만 이 가운데 교학사판 교과서의 경우, 실제 학교 현장의 채택률이 0%이며, 학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서술 내용의 오류와 한계가 지적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학사판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가 된다. 김정인, “역사 교과서 논쟁과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역사교육』 제133집, 2015; 이기훈, “그들의 대한민국 역사: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 인식.” 『진보평론』 제58호, 2013; 이신철, “탈식민·탈냉전·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역사문제연구』 제30호, 2013; 지수걸, “교학사판 ‘한국사’ 바로보기.” 『역사와 역사교육』 제27호, 2014.

II. 북한사 서술의 냉전적·우적론적 경향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북한사 서술의 경향은 우선 개별 국가로서의 북한사 서술과 남북한 비교사적 관점이 내재된 서술 등 혼재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라는 독자적 구조에 입각한 북한사의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한 보편적 서술인 반면, 후자의 경우는 체제 및 정통성 경쟁 관점이 포함된 남북간 대립 구도라는 전제가 투사되어 있다. 곧 개별 국가로서의 북한사 서술이 갖는 상대적, 객관적 서술 경향과 남북 경쟁에 입각한 일방적, 주관적 서술 경향이 서로 충돌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기본 특성에 따라 7종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나는 북한사 서술의 공통점은 후자의 경향성에 의해 지탱되는 반면 차이점은 전자의 측면을 통해 나타난다.

북한사 서술의 공통적 성격에 해당하는 남북 체제 경쟁적 사고에 입각한 우열적 역사 서술은 북한사 서술의 뚜렷한 특징이다. 있는 그대로의 역사 서술과 전달이라는 실증적 원칙이 북한사 서술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객관적 사실의 전달과 부정적 의미 부여, 판단과 재단 등이 뒤섞인 진술의 연속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남북 비교사적 서술 경향은 남한사 비교 우위 또는 북한사 비교 하위를 전제한 역사인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의 역사 전개, 곧 북한 사회의 어떤 ‘변화’이든 결국 부정적 실상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단순한 서술 패턴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같은 비판적 서술 위주의 경향은 다음 <표 1>에서 나타나는 북한사 서술시 제시된 소제목과 상자글의 주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제목과 상자글 주제의 선정 의도가 대체로 객관적 사실의 흐름보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치적 평가를 위한 장치와 근거로써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교과서별 북한사 소제목 및 상자글 주제 비교

내용 교과서	소제목	상자글 주제
금성출판사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성립, 김정일 후계체제 등장과 3대 세습,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경제 위기, 경제 개혁 노력, 핵 개발과 인권문제	주체사상의 성립과 그 역할, 북한의 권력기구, 합영법,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의 변화, 북한의 학교 교육
두산동아	김일성 독재체제 구축, 김정일의 ‘우리식 사회주의’, 북한 경제의 한계	사회주의 헌법 제정, 민속 명절 부활, 대외 개방정책 추진
리베르스쿨	북한 정부 수립과 김일성 1인 체제 완성, 3대 세습 체제, 사회주의 경제정책 실패, 산업 불균형 심화, 식량과 인권문제	무상 분배, 연안과-소련과 속청사건, 주체사상, 3대 혁명 조조운동, 친리마운동, 합영법,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영향
미래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3대 세습, 고립과 낙후 초래한 자립경제, 개방과 도발의 위태로운 줄타기	주체사상, 합영법, 북한 인권실태
비상교육	김일성 독재체제 확립, 김정일 통치와 권력 세습, 경제 고립과 침체, 경제위기 극복 노력	주체사상, 유혼통치, 선군사상, 남북한 경제력 변화, 경제 개방정책
지학사	김일성 독재체제 구축, 3대 세습체제 형성, 군사 경제 병진정책, 심각한 경제 위기	연안과, 갑산과, 유혼통치, 군사비의 변화, 군사 경제 병진정책의 문제점, 인권 현황과 이탈주민의 증가
천재교육	북한 정부의 수립, 김일성 1인 체제의 형성, 진후 사회주의 경제체제 수립, 수령 유일체제 수립, 권력 세습과 경제난	토지개혁, 노동법, 남녀평등권법, 주체 강조와 김일성 우상화, 농업협동화는 어떻게 추진되었을까, 자주노선

출처 : 고등학교 『한국사』 7종 교과서 참고.

예를 들면, 경제사 서술의 경우, 북한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며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앞섰으나 1970년을 기점으로 역전이 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는 남북간 1인당 국민총생산이 10 대 1에 이른 사실을 강조하는 방식이

다. 북한 경제의 구조, 작동 방식, 성격과 특징 같은 전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서술 방식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70년대는 고립과 낙후를 초래한 자립 경제로 설명된다. 북한의 자립경제 노선은 중소 분쟁으로 지원이 끊기자 어쩔 수 없이 내세워진 정책으로 단순화하였으며, 1970년대에 과도한 국방비 투여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측면을 부각하였다. 1980년대 이후 시기는 개방과 도발의 위태로운 줄타기 시대로 규정하고 ‘고난의 행군기’의 실상을 강조하였다. 이후 남북 경제교류 및 부분적 시장경제의 도입을 서술하면서도 경제 호전의 기미는 없다는 부정적 결론으로 이어졌다.⁵⁾ 다른 교과서에서도 1960년대 군사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이 된 측면을 제시하며, 1970년대에 국제 무역수지의 악화로 대금 지불을 연기하는 사태로 이어졌고 국제적 신용과 외채문제를 지적하였다. 식량난이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원인이 197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주체농법의 실패, 사회주의적 집단 영농방식에 따른 농업 생산력의 침체 등 때문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필연적 결과로 해석하였다.⁶⁾ 1950년대 이후 사회주의 경제를 실시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공업 생산력 증대를 꾀하였으나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1990년대 경제특구를 만들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등 한계와 성과 없음이라는 단순 반복적인 비판을 무매개적으로 서술하는 패턴이 확인된다.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의 변화에 대한 설명에서, 물가와 임금 인상에 따라 기존 화폐로 모은 예금 등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물가 상승과 사재기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사적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부패와 일탈 행위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같은 서술 경향은 북한

5)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미래엔, 2014, p. 351.
6) 정재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지학사, 2014, p. 389.

경제에 자본주의 요소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서술되고 있다.⁷⁾ 사회주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요소의 도입마저 비판할 경우, 결국은 어떤 경제체도를 시도하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 정책과 상관없이 북한 정치권력이 하는 일은 실패와 오류가 되고 만다는 선형적 규정이 반복된다면 북한 경제사의 독자적인 서술은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모든 경제문제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수렴되는 정치, 경제의 동일시 오류 내지 경제사의 정치사 종속화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은 북한 경제사 서술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북한 리더십의 정책적 오류를 구분하지 않는 서술 방식과 밀접한 연관을 띠고 있다.⁸⁾ 북한의 자립경제 노선 자체가 문제라는 것인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강조하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중공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공업 육성은 1970년대 남한 경제와 동일한 현상인데 북한 경제사 서술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냉전시기 사회주의권의 블록경제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비판적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당대의 사회주의권 일반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을 한계라고 지적한다면 북한의 경제사는 그 자체로서 한계와 오류의 반복이라는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관계에 관한 매끄럽지 못한 서술도 눈에 띈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을 서술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국자본의 유치를 시도했다는 식의 서술이 그러하다.⁹⁾ 합영법은 1984년에 제정된 법이므로 아마도 경제특구 제정 관련법을 혼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

7) 김종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금성출판사, 2014, p. 410.

8) 반면, 역사적 계기에 입각하여 북한 체제가 경직되어 가게 된 서술의 사례로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김성보, 『북한의 역사』 1, 서울: 역사비평사, 2012, pp. 249~250. 한국사 교과서인 만큼 주요한 역사적 사건을 포착하면서 서술하는 방식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위와 같은 서술 방식은 북한사 비판의 한 방법론적 예시가 될 수 있다.

9) 왕현중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두산동아, 2014, p. 316.

된다. 반면 내재적 관점에 입각한 조명을 통해 북한 경제사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도모한 서술도 확인된다. ‘북한의 농업 협동화는 어떻게 추진되었을까?’라는 상자 글을 통해 이미 토지개혁으로 부농이 억제된 상태에서 빈농의 발언권이 강화되었으며, 지주 등이 대거 월남함으로써 반대세력이 부재했고, 전쟁으로 인한 파괴로 상호 협동이 절실한 심리상태에서 가능했다는 설명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¹⁰⁾

정치사의 경우는 비판적 서술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설명하기 위해 주체사상, 동상 수립, 생가 성역화, 우상화, 독재체제 수립 등의 서술에 집중하였으며, 3대 세습 현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정치세력의 파벌적 성격과 독재체제 수립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세력이 남로당계, 연안파, 소련파 등을 차례로 제거하면서 독재체제를 확립했다는 식의 서술이다.¹¹⁾ 그러나 이와 같이 북한의 정치사를 단순화할 경우, 김일성 세력을 제외한 다른 정치세력과 북한 주민들은 대상화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단조로운 김일성 중심의 역사로 이해될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탈냉전 시대에 부응하는 북한사 서술의 의미를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냉전기 남과 북의 권위주의적 독재체제 형성은 비록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달리 하지만 분단과 전쟁에서 비롯된 대쌍 관계라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남한의 권위주의 시대를 서술하며 박정희, 전두환 등에 대해 ‘독재자’라는 호칭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 권력에 대해서는 독재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 독재체제에 대한 일방적 강조는 냉전과 권위주의를 배경으로 한 남북의 정치사 서술에 있어

객관적, 상대적 원칙에서 동떨어진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서술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 정치사에 관한 서술 오류도 확인된다. ‘김일성, 독재 체제를 구축해 가다’라는 항목에서 “김일성은 1967년 함께 항일 유격대 활동을 했던 세력마저 숙청함으로써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였다”라는 서술이 있다.¹²⁾ 이 시점에서 유일사상 체계 확립이라는 서술은 무리이며,¹³⁾ 여기서 항일유격대 세력이 갑산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김일성 세력의 직계와 방계의 분별을 간과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권력 장악을 위한 냉혈한 면모를 드러내고자 하는 서술로 이해되지만 사실 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오독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98년 북한이 헌법을 바꾸어 주석직을 폐지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통치하였다는 서술 역시 부정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¹⁴⁾ 이때 폐지된 것은 ‘주석직’이 아니고 ‘주석제’ 정도가 적당할 듯하다. 김정일은 김일성에 대한 충직함의 표현으로 그를 ‘영원한 주석’으로 떠받드는 대신 주석 직함을 피하여 선군노선에 입각한 국방위원장 직함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북한사를 남한사와 구분하여 독자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남한사와 북한사를 시대별로 나란히 서술한 교과서도 있다. 현대사 단원 전체에서 시대별로 먼저 남한사를 서술한 후 북한사를 간단하게 붙여서 서술하는 방식이다. 통일 및 남북관계의 경우, ‘주체담구’와 별도의 하위 주제를 제시하며 설명하는 점 또한 특징이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현대사 대단원 중 ‘냉전의 전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는 8쪽 분량의 서술 가운데 ‘북한 정부의 수립’

10)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천재교육, 2014, p. 319. 북한 토지개혁에 대한 일면적 서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이 참조된다. 김태우, “역사교과서 이념전쟁과 학문의 위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현대사 비교.” 『역사와 현실』 제92호, 2014, p. 152.

11) 김일성의 권력 강화 현상은 남로당, 소련과 중국, 한국전쟁 등 다양한 상황과 정치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한 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설명 방식으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pp. 760~763.

12) 왕현중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두산동아, 2014, p. 314.

13) 1967년에 벌어진 일련의 숙청사건이 유일체제 대두의 결정적 계기라는 서술은 가능하지만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일체제 확립 시점은 통상 1970년대 초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석, 『새로 쓴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 80~83 참조.

14) 왕현중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두산동아, 2014, p. 315.

을 주제로 해방 이후 북한 정권 수립까지를 1쪽 분량으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다음 ‘6·25전쟁과 전후 복구’라는 8쪽 분량의 서술에서는 ‘김일성의 권력 독점과 전후 복구’라는 주제로 2쪽 분량을 할애하였다. 15쪽 분량의 ‘냉전체제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발전’에서는 ‘수령 유일 체제의 수립’을 주제로 2분의 1쪽을 서술하였다. 남북관계의 경우, 5쪽 분량의 ‘남북관계의 변화와 유신체제’ 중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의 급변’을 1쪽 분량으로, ‘남북관계와 체제 우월 경쟁’을 역시 1쪽 분량으로 각각 다루었다. ‘민주화의 진전과 확대’라는 5쪽 분량의 절에서는 ‘김정일의 권력 세습과 한계에 부딪힌 북한 경제’를 3분의 1쪽으로, 14쪽 분량의 ‘냉전 체제의 해체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마지막 절에서는 2쪽 분량으로 ‘북한의 권력 세습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배치하였다.¹⁵⁾

위와 같이 남한사와 북한사를 같은 시대 구분의 범주 안에서 나란히 서술하는 방식은 무엇보다 ‘한국현대사’의 범주를 대한민국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닌 남과 북의 현대사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서술 방식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민족사의 맥락에서 분단의 일시적 현상을 전제하고 분단 극복의 당위성을 지향하는 목적의식적 서술 방향이라는 의의가 있다. 같은 시대 구분 하에서 남과 북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비교사적 인식 또한 가능하다. 남과 북의 동일과 차이, 각각 두 사회의 특징에 대한 효과적 인식이 제고될 수 있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남한사 중심의 북한사 인식을 심화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남북의 역사를 동시 병렬적으로 서술할 때, 일관된 원칙과 기준, 체계적인 통일정책 사관의 부재 속에서 일차적으로 남한의 역사를 자세히 소개한 후에 북한의 역사를 일부 부기하는 서술 방식은 다분히 실험적인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사 서술 후 남북관계사를 서술하는 방식에 대한 의미도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서술방식은 남한사와 북한사를 각각 나열한 상황이라

15)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천재교육, 2014, 제6단원 참조.

는 점에서 남한사+북한사의 접점을 남북관계사로 이해될 가능성을 야기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남북관계사라는 관점에 따른 하위 체제로서의 남한사와 북한사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구분 모형은 남북관계사의 개념과 관련된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요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향후 위 교과서의 서술 방식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볼 때, 북한사 서술의 공통점은 반공주의와 체제 대결적인 우적론(友敵論) 또는 우승열패식의 역사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의 교과서 ‘집필 기준’을 문제의식 없이 충실히 잘 구현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 곳곳에서 북한의 3대 세습, 경제 파탄, 주민의 빈곤과 탈북 현상 등과 국제적인 트러블 메이커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부정적 인상을 고취하기 위한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심지어 한 교과서에서는 북한사 서술의 리드문에서 김일성의 신격화 사례로써 1963년의 국내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¹⁶⁾ 쿠데타 권력의 반공주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통해 북한의 몰이성적, 광신적 성향을 설명하는 방식의 유효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접근 방식은 북한이 통일의 대상이자 민족공동체의 일부로서 동반자이기도 하다는 양면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일면적 서술은 결국 통일문제 서술과의 모순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사 인식의 부재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사 서술에 관한 한 교과서간의 차별성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¹⁷⁾

또한 한 교과서 내에서 북한사 서술의 객관성과 학술적 의의를 제대로 구현한 부분이 있는 반면 역사적 사실의 오류에 해당할만한 서술이 동시에 드러나기도 한다. 같은 교과서 내에서 과거 회귀적인 냉전적, 대결적 비판의식이

16) 정계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지학사, 2014, p. 386.

17)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역설적으로 7종 교과서의 북한사 서술에 반영된 역사인식이 극우반공 성향의 교회사 교과서와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보이는 동시에 건설적, 미래지향적 서술이 공존하는 등 혼돈스런 서술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교과서 집필진의 불철저한 인식의 반영인 동시에 반공으로의 자기 검열 또는 의식적인 회피 동기의 결과일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사 서술이 전반적으로 북한 역사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라는 목적 의식에 지나치게 경도된 반면 그동안 학계가 축적한 객관적, 학술적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III. 통일 논의 서술 : 사실과 의도의 간극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부의 집필 기준에 따라 대부분 ‘북한사’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범주로서 북한·통일문제에 접근하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사, 남북 당국간 대화의 흐름, 남북간 주요 사건 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서술 중간에 또는 별도 상자글 등의 형식으로 통일 논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거나 소개하였다.

<표 2> 교과서별 통일논의 관련 주제 일람

내용 교과서	통일논의 관련 주제(상자글 또는 부가 설명)
금성출판사	햇볕정책, 통일 이후 한국의 위상(분단비용)
두산동아	남북한의 통일방안
리베르스쿨	통일 비용, 통일정책과 북한의 변화
미래엔	평화 비용과 분단 비용
비상교육	
지학사	조봉암의 통일론
천재교육	

출처 : 고등학교 『한국사』 7종 교과서 참조.

위의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절반 가까운 교과서에서 통일 논의의 일환으로서 중요하게 활용한 소재가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이었다. 본문에서 통일 비용을 언급한 경우까지 합하면 절반 이상의 교과서에 해당된다. 1988년 이후 남한의 분단 비용은 156조 가량이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¹⁸⁾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규모를 제시하였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통일 비용의 규모를 추산하였다. 통일 후 10년간 최소 7,700억 달러(약 855조 원)에서 최고 3조 5,500억 달러(약 3,94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소개하였다. 동시에 이같은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통일에 대한 반대 급부가 더 클 것으로 내다보면서 통일된 한국이 영국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으로 그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¹⁹⁾ 또 다른 교과서에서도 분단 비용이란 엄청난 군사비 지출, 국방외교 비용, 전쟁 가능성으로 인한 공포, 이념적 갈등 등 분단으로 인한 제약에서 오는 수많은 기회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그 액수를 추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서술하였다. 이어 분단에 따른 제약이 사라지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는 더 발전하게 되고, 안보 불안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사라져 통일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독일과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2050년 통일한국의 경제적 위상’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국제적 투자회사인 골드만 삭스의 자료를 통해서 통일이 된다면 2040년경부터 프랑스, 독일을 차례로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일본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상자글을 그 래프와 함께 소개하였다.²⁰⁾ 한 교과서에서는 ‘남한의 통일정책과 북한의 변화’라는 주제의 도표를 제시하였다. 가로항은 남한의 역대 정부, 세로항은 통일 정책, 북한의 변화, 북한의 경제 등을 각각 설정하였다. 이 표는 남한의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²¹⁾ 북

18)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미래엔, 2014, p. 353.

19)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리베르스쿨, 2014, p. 372.

20) 김종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금성출판사, 2014, p. 416.

한의 대남·통일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변화 항목에서 시기별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과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징적인 항목은 ‘북한의 경제’인데 ‘통일’과 ‘북한 경제’의 연관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으나 그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교과서에서 통일 비용을 언급한 상자글 서술과 연관지어 볼 때, 경제적 가치 중심의 통일관을 강조함으로써 통일의 유익을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통일 논의의 사례로써 분단 및 통일 비용 문제를 제시한 점이 가장 커다란 공통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현대사의 연구 성과와 관심사로 볼 때, 1948년 남북협상, 1950년대 진보당과 평화통일론²²⁾, 4·19시기의 폭발적인 통일 논의, 1960~70년대 정부의 통일론과 사회운동 세력의 통일론, 1980년대 정부와 민간의 경쟁적인 통일 논의, 탈냉전기의 분단 극복론, 2000년 이후의 남북 교류론과 대북 지원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통일 논의가 수렴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사 교과서들이 대표적인 통일 논의로서 분단 및 통일 비용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시한 점은 이러한 측면에서 다소 의외이다. 그렇다면 교과서에서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일 논의를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통일 논의는 대체로 통일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을 둘러싼 방법론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념과 체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사안 또한 주요 관심사였다. 여기에는 통일이 민족적 과제라는 당위론을 전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북한 사회의 구조적·현실적 어려움, 특히 식량난 등 경제적 위기에 따른 탈북 현상 등

21) 최준재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리베르스쿨, 2014, p. 375.

22) 조봉암이 1957년에 『중앙정치』에 쓴 글을 ‘조봉암의 통일론’이라는 상자글로 소개한 교과서가 주목된다(정재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지학사, 2014, p. 390). 위 글을 소개한 후, ‘진보당은 당시 금기시되었던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며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안을 내세웠는데, 이는 북한과 소련, 중국이 주장하는 중립국 감시위원단 감시 하의 총선거안과 같은 주장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서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서술은 조봉암의 용공혐의를 암시하는 듯한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2011년 대법원이 재심 끝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봉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 더욱 적절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대외적 위기와 한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통일 당위론에 점차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북한과 당장 통일할 경우, 남북 모두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대두함에 따라 통일 유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으며, 분단이라는 현 상태를 잘 관리하는 하는 것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었다.²³⁾ 이처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정부, 학계, 언론 등으로 하여금 통일논의에 대한 접근 틀의 수정을 유도하였다. 즉 통일의 경제적 효과 또는 이익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인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과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맹목적,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통일 교육은 더 이상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통일 시 예상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맥락에서 경제적 가치 중심의 통일 담론이 좀더 설득력 있는 통일담론으로 부각되어 나갔다.²⁴⁾ 그에 따라 분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향후 통일시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대차대조표식 통일 논의의 제시가 좀더 현실적, 효과적인 통일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교과서 집필진자들에게 수용된 결과로 이해된다. 통일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든 현실감 있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통일이 되면 남한이 북한을 먹여 살리게 됨으로써 함께 망한다거나 남한의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사회적 기우가 반통일 논리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논리의 일환으로서 분단 및 통일 비용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의의가 경제적 측면에서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23) ‘2014 KBS 국민 통일외식 조사’에 의하면, 2010~2013년 사이 ‘통일 반대’ 의견이 5~1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단 상황 유지’ 의견은 대략 18~24% 사이를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2014, p. 13 <표 1-1> 참조.

24) 실제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첫째는 ‘통일비용’이었다. 2010~2013년 사이의 경우, 이같이 응답한 비율은 약 39~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책, p. 13 <표 1-2> 참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 사회문화적 측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통일의 의의와 가치를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이 서로를 미워해온 심리적 상처의 치유를 위한 노력 등과 같은 측면을 포함하여 좀더 복합적으로 설명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분단 극복과 통일 지향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분단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조한 한 교과서의 다음과 같은 설명문이 주목된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팎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통일을 위한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와 협력은 분단 이후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적, 심리적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²⁵⁾

통일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아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사 교과서인 만큼 공부정의 평가에 앞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맥락이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 교과서에서 소개한 ‘북한의 학교 교육’에 관한 1쪽 짜리 특집은 다분히 시사적이다.²⁶⁾ 이 글은 북한의 학교 제도, 학교 생활, 대학 진학과정 등을 소재로 하여 동시대 같은 또래인 북한 학생들의 생활상을 소개함으로써 북한의 현실에 대한 남한 학생들의 관심을 적절하게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의미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사례로는, 국제적 냉전 체제의 해체 과정을 서술하면서 ‘주제탐구’ 형식으로 ‘독일과 베트남, 분단에서 통일까지’라는 2쪽 분량의 서술을 통해 다른 분단 국가들의 사례를 다룸으로써 분단과 통일의 세계사적 안목을 제공하려고 한 경우

25) 김종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금성출판사, 2014, p. 416.

26) 위의 책, p. 412.

가 있다.²⁷⁾

통일논의 서술에서 드러나는 사실과 의도의 간극은 좀처럼 숨기기 쉽지 않다. 좀더 효과적인 논의 주제를 선택하여 서술하고자 하는 집필진의 의도는 그것대로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인 만큼 분단 이후 실제로 논의되어 왔던 다양한 분단 극복론과 정부 및 민간측의 통일 담론에 기반하여 맥락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사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두 개의 윈도우만으로 북한·통일 문제를 다루고자 한 집필 지침의 한계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 방법론 즉 통일방안에 대한 소개 역시 통일 논의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소재 중의 하나라고 할 때, 남과 북의 통일론을 비교하여 서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남한만의 통일론, 그것도 정부의 통일론만을 제한적으로 소개하기 보다는 민간측을 포함하여 북한의 통일 방안과 변화과정까지 종합적으로 다룬다면, 좀더 입체적인 서술이 될 것이다.

IV. 남북관계사 인식의 편향과 일방성

남북관계는 좁은 의미에서 볼 때 남북 정부 당국간의 관계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간 차원의 다양한 관계망을 포함한다. 교과서에서는 일차적으로 전자에 해당하는 양측 당국간에 진행된 남북대화를 남북관계사로 서술하였다. 특히 1970년대 초와 탈냉전기의 남북대화 및 2000년대의 남북정상회담 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각각의 성격과 특징을 다루었다. 즉 아래의 <표 3>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교과서에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등 ‘3대 합의’를 남북간 통일 노력

27)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천재교육, 2014, pp. 350~351.

의 결과물로서 비중있게 다루었다. 동시에 주요 합의 문서의 내용을 교과서에 소개하고 학습 자료로써 제시하였다. 그런데 교과서 지면의 한계로 원문 전체를 소개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만을 소개하였는데 더더 비핵심적 부분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문서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가 확인된다. 예를 들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일부 내용을 소개할 경우, 전문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교과서들이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가장 강조해온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은 전문에 있는 남북관계에 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된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규정은 남북관계의 성격과 특징, 역사와 지향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중요한 합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북간 합의 문서에 대한 핵심적 의의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좀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에 대한 서술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한 정부 간에 최초로 공식 합의한 문서”라고 규정하였는데²⁸⁾ 그 의미와 의도가 불분명하다. 남북기본합의서 이전에 남북간에 합의한 문서로는 7·4공동성명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최초로 공식 합의한 문서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7·4공동성명을 설명하면서 “분단 이후 남북한 당국이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이다”²⁹⁾라고 서술하였다. 이같은 서술의 혼란은 ‘공식’ 합의인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의미 부여를 달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식 합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시 모호하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국회에서 인준 받았으므로 공식 합의이고 7·4공동성명은 당국자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비공식 합의라는 의미라면 그 또한 적절치 않다. 1970년대 초의 테탕트 국면에서 안보 논리를 내세워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유신

28)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비상교육, 2014, p. 390; 최준재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리베르스쿨, 2014, p. 372.

29) 김종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금성출판사, 2014, p. 413.

체제로 나아가기 직전에 시도된 비밀 회담을 당시의 국회에서 인준 받는 절차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설령 당대에 그러한 절차가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더라도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사실상 분단 이후의 남북관계는 당대의 주객관적 조건에 따라 공식, 비공식, 공개, 비공개, 일방적, 쌍방적 등 다양한 모양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측 대표인 이후락, 김영주가 문서 하단에 서명하면서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고 굳이 명기한 것은 이 문서의 성격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말해준다.³⁰⁾ 두 사람 개인 간의 합의가 아닌 양측 정부의 대표임을 명확한 것이다. 또한 7·4남북공동성명은 양측이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사전에 합의된 문서의 성격을 공식화하였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부간 최초의 합의 문서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의 오류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강조점에 대한 초점이 잘못 전달될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의 핵심은 전문에 규정된 남북관계에 관한 정의와 탈냉전기라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남북이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을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향으로써 합의했다는 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가 최초의 합의인가 아닌가, 정부간 합의인가 아닌가, 공식 합의인가 비공식 합의인가 등과 같은 문제로 비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설정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의를 학생들이 암기하고 또 시험문제로 다루어진다면 적절한 통일교육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0)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는 표현으로 최종 귀착되었지만, 초안은 각각 “박정희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하여”, “김일성 수상의 위임에 의하여”였다. 합의과정에서 좀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뀐 셈이지만 이 문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지형, 『테탕트와 남북관계』, 서울: 선인, 2008, p. 197.

<표 3> 교과서별 남북관계사 서술의 특징

내용 출판사	특징
금성출판사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중심 서술(이하 '3대 합의'로 칭함)
두산동아	3대 합의 중심 서술. 남북관계의 국제적 측면 포함 서술
리베르스쿨	3대 합의 중심 서술.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과정 표로 제시
미래엔	3대 합의 중심 서술. 1980년대 이후 주요 남북 협력사업 그래프로 제시
비상교육	3대 합의 중심 서술
지학사	3대 합의 중심 서술. 민간교류도 서술
천재교육	3대 합의 중심 서술. 미국의 남북관계 권유, 유엔에서의 남북 경쟁 등 남북관계의 국제적 측면도 서술

출처 : 고등학교 『한국사』 7종 교과서 참조.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부정확한 사실 전달과 서술 경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기의 경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어 통일을 위한 실무자 회의가 전개되기도 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³¹⁾거나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천명하였고,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어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³²⁾는 등의 서술은 앞뒤 서술이 맞지 않는다.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식의 기술도 어색하며³³⁾ 남북조절위원회는 실무자 회담을 거쳐 남북 공동위원장 회의와 세 차례에 걸친 본회의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회의만을 거론하거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식의 서술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적절한 진술이 아닐 수 없다.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하여 민족화합

31)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비상교육, 2014, p. 390.

32) 김종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금성출판사, 2014, p. 413.

33) 실제로 임무를 위한 특정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그 보다는 ‘구성’되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라고 서술하였다.³⁴⁾ 그러나 1980년대 전반 전두환 정권의 대북 정책은 쿠데타 정권의 안정을 목적으로 매우 기만적인 대북 정책을 추구하였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 평가라는 점에서 의아한 서술이다. 위의 서술에 이어 1984년 대북 수해물자 원조, 이듬해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단 교환공연 실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같은 대북 유화정책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북한을 유인하여 기만적인 정세 안정을 추구하려던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는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이 교과서의 경우,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1994년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1995년 북한이 수재로 식량난을 겪자 쌀을 무상 지원하였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였다.”³⁵⁾

위의 서술은 김영삼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읽힌다. 반면 학계의 김영삼 정부시기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는 비판 또한 적지 않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이 사망하자 조문과동 국면을 조성하여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간 측면을 배제한 일면적 서술이라 할 것이다. 3단계 통일방안의 경우도 노태우 정부 통일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의미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기술한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강조가 남북관계사에서 정치적, 실체적

34)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비상교육, 2014, p. 389.

35) 위의 책, p. 390.

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한 단순, 건조한 서술이라는 판단이다. 이 밖에 개성공업지구가 조성된 시점은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로 오해할 만한 서술도 눈에 띈다.³⁶⁾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선언’을 본문과 사진 설명에서 반복적으로 ‘10·4 남북공동선언’이라고 명기한 점 또한 적절치 않다.³⁷⁾

지난 이명박 정권기의 남북관계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강행, 연평도 포격사건 등 잦은 군사 도발로 남북 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³⁸⁾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 남북관계의 극단적 대립의 원인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인식에 대한 종합적, 객관적 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의 평가와도 같은 일방적인 교과서 서술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서술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한 교과서에서는 북핵문제를 매개로 한 1990년대 중반 북미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합적인 사고를 유도하였는데,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자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았다.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로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대북 강경파인 부시 정권이 출발하면서 북미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부시 정권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합의 때 약속한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북한은 다시 NPT 탈퇴로 맞섰다.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북핵문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³⁹⁾

위와 같이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1990년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서술은 이 교과서가 유일하다. 한반도문제를 이해할 때,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한미, 한일, 한중, 한러 관계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중, 북러, 북일, 북미 관계 등과 같은 북한과 주변국들의 관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남북관계를 남과 북 양자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였지만 위의 교과서에서는 좀더 포괄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북핵문제를 매개로 북미관계의 변화 양상을 제시한 점은 바람직한 서술 방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집필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서는 남한의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남북대화의 주요 과정을 부각시키는 서술 방식을 취하였다. 북한사에 대한 비판적 서술과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서술하면서 당국간 남북대화와 민간의 교류·협력 노력을 다루라는 것이 집필 기준의 핵심적 주문이었다. 그러나 <표 3>을 통해 볼 때, 일부 교과서를 제외하곤 대부분 민간 부문의 교류와 협력의 흐름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하지 않았다. 민간 통일운동사 측면에서 볼 때, 1980년대 후반 이후는 민간측과 정부측이 상호 경쟁하면서 견인해나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⁰⁾ 특히 2000년대 이후의 민간측과 정부측의 상호관계와 남북교류의 맥락은 좀더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은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적대적이었지만 때로는 상호보완 내지 역할 분담의 관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36) 김중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금성출판사, 2014, p. 415.

37) 전문, 8개항 및 부기 등으로 구성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공식 약칭은 ‘10·4선언’이다. ‘10·4남북공동선언’이라는 표현은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나 공식적, 통상적 명칭으로 보기 어려우며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38)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비상교육, 2014, p. 390.

39) 왕현중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두산동아, 2014, p. 319.

4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제10장 통일운동.” 『한국민주화운동사』 3, 서울: 돌베개, 2010, p. 950; Kim Ji-hyung, “The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s on Unification during the Early Post-Cold War Era: Competition and Coexiste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 17, no. 1, 2012, p. 196.

궁극적으로 남북 간의 통일 과정이 어느 한 측에 의한 일방적인 작용의 결과로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다. 오히려 쌍방의 영향력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변화,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분단 극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정부의 집필 기준은 전자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 역시 남한 중심의 남북 관계사 인식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계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한미, 한일, 한중 등 대외관계사의 맥락과 달리 남북간의 관계사는 분단 이전 같은 민족사를 공유한 기초 위에서 장차 통일을 이루어갈 상대방이라는 매우 특수한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사는 한국과 주변국간의 ‘작용에 따른 반작용’ 관점에 입각한 일반적인 의미의 대외 관계사와 달리 남과 북의 상호작용이라는 동시성의 원칙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만을 중심으로 서술할 경우, 남북 상호작용에 의한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닌 주변국과의 일반적인 대외관계사 범주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정책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다면 남과 북의 통일정책의 동일과 차이를 비교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좀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데 용이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을 간과하는 태도는 북한을 대상화함으로써 특수관계사 관점의 실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남한 중심의 통일정책 서술 태도는 집필 기준에서 제시한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라는 지침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순탄할 때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의한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 탓이라는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적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강요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북한의 도발 등으로 남북 간의 갈등이 반복되었으나” 등과 같은 구절이 집필 기준에서 확인된다. 남북관계사의 관점은 냉전, 탈냉전을 거치면서 남과 북이 모든 원인과 과정, 결과에 함께 간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에 대한 일방주의적 관점과 서술의 강요는 과거 냉전기 교과서의 수준을 미처 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남북간 관계사라는 쌍방주의적 관점을 외면한 일면적, 일방적 서술에 그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

V. 맺으며

내년에 치러지는 2016학년도 대입 수능부터 한국사 과목은 기존의 사회탐구 영역내 선택과목에서 공통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한국사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가는 상황이다. 지난 수년간 ‘교과서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사회적 격론이 벌어지면서 현대사 교육에 대한 학계 안팎의 관심과 논의가 더욱 비등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4년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 그동안 검토되지 않았던 북한·통일 관련 서술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교과서의 북한사, 통일논의, 남북관계사 서술 내용의 특징과 한계 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북한사 서술은 한국현대사의 일부로 편재되었다. 이같은 서술 패턴은 한국현대사=남한사라는 전제 하에 남한사의 일부로서 북한사를 수렴하는 인식의 소산이다. 일부 교과서는 시기구분에 따라 남한사와 북한사를 병렬적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 북한사 편재 방식의 차이는 교과서 집필진의 한국현대사와 남한사, 북한사의 구분과 범주에 대한 일정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사 편재의 차이는 그만큼 다양한 관점과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역설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의 차이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주지 않도록 향후 면밀한 보완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사에 대한 가치 절하적, 부정적 서술 경향은 사실상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시대의 국정교과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남한사 서술에 있어서는

반공주의가 제거되었지만 북한사 서술에서 반공주의는 여전히 근본적인 전제나 목적처럼 기능하였다. 부정적 평가로 일관된 서술 방식의 단조로움은 북한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학습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그간 학계의 논의와 학술적 성과를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타자적 관점에 입각해 북한 사회의 문제점만 강조한다면 북한사 전개에 대한 내재적 접근과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남한 현대사에 대한 서술 태도와 구별되는 괴리감은 남북 이질감의 강조로 보일 수 있으므로, 통일 지향의 현대사 인식을 제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지점에서 역설적이게도 교학사관 교과서로 대변되는 ‘뉴라이트’의 북한사 인식과 사실상 차이가 없게 된다. 북한사에 대해서는 8종 교과서가 모두 반공주의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오직 남한사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따라 뉴라이트 역사 인식과의 분별성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등교육 과정에서 북한사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그동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통일관련 문제는 지속적으로 출제된 반면 북한사는 한 번도 다루어진 적이 없다. 이같은 특징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북한사의 교육적 의의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부분이다. 입시 교육으로 기능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수능에 나오지 않는 영역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관심 부재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향후 수능 한국사에서 북한사에 대한 문항 출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 통일문제는 분단 극복의 한국사라는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볼 때,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현대사 교육의 지향점이 남북의 평화와 분단 극복에 대한 강조라고 할 때, 북한사, 통일논의, 남북관계사 서술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좀더 긴밀한 상호 연관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는 북한사에 대한 과도한 냉전적, 우적론적 서술로 인해 통일논의와 남북관계사 서술에까지 상호 제약을 초

래하는 문제점을 수반하고 말았다. 상호간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통일 관련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뚜렷한 인식의 공유가 요구된다. 즉 남과 북의 이질성을 강조할 것인가 동질성을 보다 강조할 것인가, 대결을 추구할 것인가 교류·협력을 추구할 것인가, 냉전적 과거 지향이나 통일 이후의 미래 지향이나, 즉자적 대북 처방을 추구할 것인가 전략적 접근을 시도할 것인가 등을 둘러싼 학계의 진지한 연구성과와 논의가 보다 충분히 수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중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금성출판사, 2014.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비상교육, 2014.
 왕현중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두산동아, 2014.
 정재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지학사, 2014.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천재교육, 2014.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리베르스쿨, 2014.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미래엔, 2014.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2011.

김성보, 『북한의 역사』 1, 서울: 역사비평사, 2012.

김정인, “국정 『국사』 교과서와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체계와 내용 분석.” 『역사와 현실』 제92호, 2014.

김정인, “역사 교과서 논쟁과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역사교육』 제133집, 2015.

김지형, 『태탕트와 남북관계』, 서울: 선인, 2008.

김태우, “역사교과서 이념논쟁과 학문의 위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현대사 비교.” 『역사와 현실』 제92호, 2014.

박진동, “해방후 현대사 교육 내용 기준의 변천과 국사교과서 서술.” 『역사학보』 제205집, 2010.

박태균,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 분석.” 『역사교육』 116, 2010.

방대광, “역사 교과서, 현대사를 어디까지 서술할 것인가?” 『역사와 교육』 제18집, 2014.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이기훈, “그들의 대한민국 역사: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 인식.” 『진보평론』 제58호, 2013.

이신철, “탈식민·탈냉전·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역사문제연구』 제30호, 2013.

이종석, 『새로 쓴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임종명,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현대사 서술과 민족·국가·대한민국.” 『역사

와 교육』 제13집, 2011.

지수걸, “교학사관 ‘한국사’ 바로보기.” 『역사와 역사교육』 제27호, 2014.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2014.

Kim Ji-hyung, “The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s on Unification during the Early Post-Cold War Era: Competition and Coexiste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7 No.1, 2012.

ABSTRACT

Descriptive Features regarding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n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 Focused on the Mutual Restriction of Consciousness about North Korean History, Unification Discussion, and the History of North-South Relations

Kim, Ji-Hyung(Seowon University)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North Korean history, unification discuss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described in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2014 edition. The historical recognition reflected in the description of the North Korean history seems to be stemming from the confrontation of the structures and the superior or inferior way of thinking. It is focused on the critical descriptions of the situation and raising questions rather than stressing the internal context of the North Korean historical development. These cold war-like, friend-or-enemy descriptions acted as a problem limiting the following unification discuss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description. For the description regarding the unification discussions, it is focused on discussions of economical values. It is a reflection of the discussions mainly led by the government and press after the post-cold war era. As for the Korean history textbook, wide historical description is demanded about the various unification discussions and the North-South unification policies after the division.

Inter-Korean relations part is centered on the major agreements the North and South have made. For some parts, not only were core contents and educational focus inaccurate, but the successive governments' relaxed descriptions of unification policies were also found. Before anything else, unilateral descriptive method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can be pointed to as a problem. More of an objective description of interactive influence of both parties is needed. From the future oriented viewpoint for overcoming the division, it still fundamentally has not overcome the limits of past government designated textbooks.

Keywords : Korean History Textbook, North Korean History,
Discussions on Unification, North-South Korea Relation History,
Korean Contemporary History, Historic Consciousness

투고일 : 2015년 06월 30일, 심사일 : 2015년 08월 03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8월 07일